

# 이익금 노린 지자체들 개발 열풍…주민 없는 ‘유령도시’ 우려

## 이슈현장

### 목포·무안 신도시 경쟁적 개발 배경과 문제점

편의시설 확충 없이 택지만 개발…텅 빈 신도시

남악지구 이익금 분배 법정다툼 속 시간 허비도

전남의 행정수도를 끊기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남악 신도시 조성 사업은 개발이익금 배분을 놓고 전남도와 무안군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또 인근 지자체도 앞다퉈 택지 개발에 나서는 등 목포·무안 일대의 도심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다. 택지 조성 과정에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익금 배분 지루한 다툼=전남도와 무안군은 가장 먼저 조성된 남악지구의 개발이익금 배분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달 29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사업 이익금 분배 소송을 제기했다.

무안군은 전남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중 40%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이 조례가 폐지된 만큼 이익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악지구 개발이익금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많게는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말 첫 삽을 뜨게 된 오룡지구도

하수처리장 문제로 수년간 개발이 지연됐었다. 전남도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무안군은 신설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새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주가비용 82억원을 무안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남 서부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 지자체가 서로 ‘돈 다툼’만 벌이다 시간만 허비한 끝이다.

갈등의 씨앗은 사업 착공을 앞둔

오룡지구와·임성지구에도 존재한다.

오룡지구 개발에는 무안군이 참여하게 돼 있지만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

를 뒤는 남악지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남도와 무안군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또 목포시와 무안군이 참여하는 임

성지구 개발도 목포시는 적극적인 반

면, 무안군은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지구 내 편의시설부터 확충해야 = 지난 3월 무안 오룡초등학교 신축 공사가 늦어져 이 학교 신입생과 유치원생 128명이 인근 남악초교에서 새 학기를 맞았다. 남악지구에 아파트는 들어서는데 정확한 학생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이 같은 문제는 조성이 마무리된

남악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전남도청 인근의 건물 중 임대가 되지 않아 텅 빈 곳이 늘고 있고, 부지를 매입해 놓고 아예 건물을 짓지 않아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곳도 많다. 앞으로 오

룡지구를 비롯한 망월부도심권과 임

성리역세권 등 개발해야 할 대규모

지구가 남아 있는데도 사람이 몰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목포시는 현재 백련지구

(807세대)·옹해2지구(2775세대)·대

성지구(1391세대) 등을 개발하거나

분양이어서 목포, 무안 일대에 너

무 많은 택지가 개발돼 사업 성공여

부도 불투명하다. 전남도청 이전으로

전남도청 이전으로

공무원 등의 이주는 대부분 끝난 상

태라서 새로운 수요를 찾기 힘든데,



남악신도시 개발 과정에 전남도와 무안군이 개발이익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지자체간 갈등이 계속되고, 난개발로 분양이 되지 않는 곳도 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앞다퉈 택지만 개발하는 전형적인 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 개발 소식에 임성지구 일대의 땅값이 평당 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투기 조짐이 일고 있고, 오룡지구(부

지 270만㎡·공사비 5990억원) 예정

부지가 연액지반이라서 공사비가 남

악지구(362만㎡·5400억원)에 비해

많이 든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시설,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이전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포대 의과대 유치,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등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교육기관과 시설을 먼저 갖추면서 새로운 지구를 개발하는 ‘내실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도청이전 7년…공공기관 절반도 안갔다

### 이전대상 75곳 중 36곳 입주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옮겨온지 7년이 지났지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 75곳 중 현재까지 36곳만 남악에 등재를 했다.

공공기관의 이주는 인구 증가와 밀접하고 남악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에도 탄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이들 기관이 신도시에 신사옥을 지을 택지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임대하고, 인근에 기관 직원들이 거주하며, 이들을 겨냥한 식당과 서비스업종 등이 이파라 자리리를 잡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거나 이전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이전에 따라 7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전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남통계사무소 등 36개 공공기관이 이주를 마쳤다.

또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도청 인근에 신사옥을 지어 입주를 앞두고 있고, 보훈회관이 완공되면 상

이군경회전남지부, 무공수훈자회 등

4개 관련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대

한노인회 전남연합회도 현재 건물을 설계중이며 조만간 ‘남악시대’를 열게 된다.

이에 따라 남악으로의 이주가 기대됐던 재향군인회, 농어촌생산자연합회,

식습업중앙회, 약사회, 택시운송사업

자조합, 곡물협회 등 18개 기관은 아

예 이전 계획이 없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투항한 노태우…추징금 230억 9월 초 완납

### 버티는 전두환…검찰, 조카 금융계좌 압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다음달 초 모두 납부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 측은 동생 재우씨가 남은 추징금 중 150억 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

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귀국한 노씨 아들 재

현씨가 몸이 불편한 노씨를 대신해 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측과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

동방그룹 회장 측도 나머지 추징금



/연합뉴스

## 대한민국 대학의 기준이 높아진다

조선대학교는 국내 15위를 넘어 세계화, 정보화, 융합과 통섭의 완성을 향해 산학연계 정보화 및 연구 인프라 확충으로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호남최고의 명문대학의 발돋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호남지역 대표대학 조선대학교가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으로 출발한 조선대학교는, 교육으로 나라를 부강케 한다는 처음 그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도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강한 글로벌(Glocal) 다양한 융합전공을 창출하는 조선대학교는, 미래형 인재상인

통섭 인재 양성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호남 거점 정문으로 키워 주신 조선대학교는, 특화된 국제화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옹비해 나아가겠습니다.

CHOSUN UNIVERSITY  
HAPPY UNIVERSITY  
조선대학교 窓

조선대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접수기간 : 입학사정관전형 : 2013. 9. 4(수) ~ 9. 9(월)  
· 군사학과 및 특별전형 : 2013. 9. 6(금) ~ 9. 13(금)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www.chosun.ac.kr>  
입학문의 : 조선대학교 입학처 ☎ 062)230-6666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 입학사정관전형 (570명)  
· 군사학과전형 (31명)  
· 특별전형 (정원 외 포함) (422명)  
· 계 (1,023명)